

# 국제질서 변환과 전략적 각축기의 미중관계: 중국의 전략적 입장과 정책을 중심으로

**박병광**  
국가안보전략연구소


2014년 3월

## 보다 나은 세상을 향한 지식 네트워크

---

동아시아연구원(The East Asia Institute: EAI)은  
2002년 5월 설립된 민간 연구기관입니다.  
EAI는 동아시아 국가들이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 그리고 개방된 사회로 발전하여  
평화로운 국제 사회 건설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연구를 통한 정책 제안을 사명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EAI는 정책 이슈에 관하여  
어떠한 정파적 이해와도 무관한 독립 연구기관입니다.  
EAI가 발행하는 보고서와 저널 및 단행본에 실린 주장과 의견은  
EAI와는 무관하며 오로지 저자 개인의 견해를 밝힙니다.

 EAI는 등록된 고유의 트레이드마크입니다.

© 2014 EAI

EAI에서 발행되는 전자출판물은  
비영리적 목적을 위해서만 제공됩니다.  
또한 내용의 수정을 허용하지 않으며  
온전한 형태로 사용할 것을 권고합니다.  
상업적 목적을 위한 복사와 출판은 엄격히 금지합니다.  
EAI 웹사이트가 아닌 다른 곳에 본 출판물을 게시하려고 할 때에는  
사전에 협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EAI의 모든 출판물은 저작권법에 의해 보호 받습니다.

ISBN 978-89-92395-56-63 95340

재단법인 동아시아연구원  
서울 중구 을지로 158, 909호 (을지로4가, 삼풍빌딩)  
Tel. 02 2277 1683  
Fax. 02 2277 1684



## 국제질서 변환과 전략적 각축기의 미·중관계: 중국의 전략적 입장과 정책을 중심으로

박병광

국가안보전략연구소

### I. 들어가는 말

1970년대 초반 미국과 중국의 관계정상화가 이루어지던 시기 미국에게 있어서 중국은 결코 전략적 각축의 대상이 아니었다. 그저 동아시아에서 소련의 팽창을 저지하기 위해 미국이 손을 잡아야 했던 선택적 대상의 하나였으며 일종의 대리방어막에 불과했을 따름이었다(키신저 2012, 270-272). 미국이 주도하는 세계질서와 동아시아 아키텍처에서 중국은 일정부분 필요를 채워주는 수단에 불과했던 것이다. 그러나 21세기에 들어선 오늘날 중국은 몰락한 소련을 대신하여 미국과 세계 패권을 놓고 경쟁하는 국가로 자리 잡았다. 다만 20세기 미국과 소련의 관계가 치열한 전략적 경쟁으로 점철되었다면 21세기의 미·중관계는 경쟁과 협력, 갈등과 타협이 공존하는 모습을 보인다. 나아가 미국과 중국은 세계질서와 동아시아의 새로운 아키텍처를 형성하기 위해 가장 중요하고 영향력 있는 행위자로 작용하고 있다.

21세기 미국과 중국 사이에서 벌어지는 전략적 각축의 부담은 도전자의 위치에 있는 중국이 더욱 크게 느끼고 있는 듯하다. 왜냐하면 전통적으로 기존 패권국은 새로운 강대국의 부상 자체를 좌절시키거나 또는 부상속도를 늦추기 위해 예방전쟁, 봉쇄 및 관여전략 등 다양한 방식으로 새로운 강대국의 부상에 대응해 왔기 때문이다.<sup>1</sup> 반면 부상하는 중국은 기존의 세력전이(power transition)이론 혹은 공격적 현실주의(offensive realism) 이론 등이 주장하는 미·중 ‘충동불가피론’과 ‘현상타파론’을 비롯한 다양한 전통적 주장들을 극복하면서 ‘평화발전론’을 실현해야만 하는 상황에 직면해 있다. 즉, 미국의 직·간접적인 봉쇄와 견제를 돌파함과 동시에 주변국이 느끼는 ‘중국위협론’을 해소하면서 자국의 생존과 이익 공간을 넓히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이다.

중국은 자국의 부상이 대내외적으로 기정사실화된 21세기에 들어서면서 이른바 “평화발전”(和平發展)과 “조화세계”(和諧世界)를 강조하기 시작했다. 중국의 부상이 결코 기존의 국제체제와 주변국에 위협을 가하지 않고 평화로운 방식으로 이루어질 것이며, 중국이 추구하는 미래 국제사회는 조화로운 세계(harmonious world)를 지향한다는 것이다(中華人民共和國國務院新聞辦公室 2011). 이와 같은 중국의 주장 및 전략은 냉전종식 후 ‘평화’와 ‘발전’이야말로 가장 중요한 문제라고 강조하면서 “도광양晦”(韜光養晦)와 “유소작위”(有所作爲)를 주장한 덩샤오핑(鄧小平)의 사상을 계승·발전시킨 것이다.

최근 중국의 최고지도자로 등장한 시진핑(習近平)은 21세기 “중국의 꿈”(中國夢)과 “중화민족의 부흥”(中華民族的復興)을 강조하고 있다. 또한 대외관계의 키워드로 “새로운 강대국관계”(新型大國關係)를 내세우면서 특히 미·중관계에서의 상호이해증진과 전략적 신뢰구축을 강조하고 있다. 그러나



미국은 중국의 전략적 의도에 대해 의구심을 거두지 않고 있으며, 최근에는 아시아-태평양 지역에 대한 개입을 강화하기 위한 “재균형”(rebalancing) 정책을 시도하고 있다. 세계정치의 두 중심축인 미국과 중국 즉, 주요 2개국 체제(Group of Two: G2)가 아시아-태평양을 무대로 펼치는 패권경쟁이 향후 동아시아의 정치외교·안보의 판을 흔들 수도 있는 것이다.<sup>2</sup>

그렇다면 중국은 자국의 부상으로부터 기인하는 21세기 국제질서의 변환과 미·중 전략적 각축의 파고를 헤쳐 나가기 위해 어떠한 대외전략과 목표를 수립하고 있을까. 또한 중국은 대미관계는 물론 새로운 동아시아질서의 구축을 위해 어떠한 전략적 그림을 그리고 있는 것일까. 이 글은 미·소 냉전시대를 넘어 미·중 양강체제로 굳어져 가는 역사적 변환기에 중국 대외전략의 내용을 살펴보고 이를 바탕으로 동아시아에 다가올 새로운 아키텍처의 모습을 전망하면서 한국의 정책적 시사점과 대응방향을 모색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 II. 21세기 미·중관계의 기본 구조와 성격

21세기 미·중관계의 구조와 성격은 여러 가지 방식으로 묘사될 수 있다. 그러나 오늘날의 미·중관계를 가장 적절히 표현할 수 있는 용어는 ‘갈등속의 협력’(cooperation amid struggle)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미·중관계는 1972년 정상화 이후 현재까지 40년이 넘는 세월 동안 ‘갈등속의 협력’ 관계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적잖은 전문가들이 미·중관계의 성격을 ‘갈등과 협력’이 병존하는 관계로 묘사하지만 엄밀한 의미에서 미·중관계는 기본적 갈등구조의 바탕 위에서 선택적 필요에 따라 협력을 추구하는 ‘갈등적 협력’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더욱이 오늘날 중국의 국력이 급속히 상승하면서 미·중관계는 동아시아를 포함한 세계적 수준에서 갈수록 경쟁구조가 심화되고 있으며 이는 필연적으로 구체적 이슈와 영역별로 양국 사이 갈등의 형태로 더욱 자주 드러나고 있다. 그럼에도 미·중 양국이 협력을 강조하고 또한 실제로 협력을 추구하려는 것은 갈등에서 증폭된 대립과 마찰이 상호이익 저해와 세계질서 안정 파괴로 이어지는 것을 원치 않기 때문이다.

다음으로 오늘날 미·중관계의 구조와 성격은 ‘전략적 불신 속의 협력’(cooperation amid strategic mistrust)이라는 말로 묘사될 수 있을 것이다. 왜냐하면 미·중 간에 이루어지는 많은 범위의 협력에도 불구하고 이는 기본적으로 전략적 불신을 저변에 깔 상태에서 현실적 필요에 따라 협력하는 양상을 보이기 때문이다. 근본적으로 미국은 중국의 중·장기적인 전략적 의도와 자국의 국가이익에 대한 도전 가능성에 대해 우려하고 있는 반면 중국은 미국이 자국의 부상을 억제하거나 방해하며 또한 공산당 정치제도를 훼손하려는 한다고 의심한다(Lieberthal and Wang 2012). 일례로 미국은 아시아-태평양 지역을 향한 재균형 정책이 이 지역 안정에 기여하고 지역 내 건설적 역할을 확대하며 미국의 국익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라고 주장하지만 중국은 이를 자국에 대한 견제와 억제전략의 일환으로 간주하고 있으며 지역정세의 불안정을 초래할 뿐이라고 본다(楊潔勉, 2013, 18; 金燦榮·戴維來, 2012, 19-23; 王義危 2012, 66-72). 이와 같은 미·중관계는 하딩(Harry Hrrding)이 주장한 바와 같이 “깨어지기 쉬운 관계”(fragile relationship) 또는 램프턴(David Lampton)이 묘사한 것처럼 “동상이몽”(same bed different dreams)의 관계로 비취질 수밖에 없다(Harding 1992; Lampton 2002).

20세기의 미·중관계는 미국이 일방적 힘의 우위를 바탕으로 중국에 대해 공세적이고 압박적인 양상을 보여 왔다고 할 수 있다.<sup>3</sup> 그러나 20세기와 달리 21세기 들어서 확연히 드러나는 미·중 간 종합국력격차의 축소는 양국관계를 훨씬 복잡하게 만드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중국의 경제규모는 2010년을 기



점으로 미국 다음의 세계2위에 올라섰고, 국방비 지출 역시 2009년부터 미국에 이은 세계 2위 국가가 되었다. 또한 중국은 2012년 말 기준으로 3조 3,000억 달러를 보유한 세계 1위 외환보유국이며, 그 중 1조 달러 이상을 미국 국채매입에 투자하여 현재 세계 최대의 미국 채권 보유국이다. 중국이 미국의 경제력을 좌우할 수 있는 핵심 열쇠를 쥐고 있는 형국인 셈이다. 중국은 국력이 증대될수록 ‘국제질서의 민주화’, ‘신형대국관계’ 등을 주장하면서 미국에게 중국을 존중하고 대등하게 대해줄 것을 요구하고 있다.<sup>4</sup>

**[표 1] 중국과 미국의 각종 국력지표 비교(2012년)**

중국	항목	미국
13.51억	인 구	3.139억
9,596,961 km <sup>2</sup>	국토면적	9,826,675 km <sup>2</sup>
8조2,271억 달러	전체 GDP	15조 6,848억 달러
6,188 달러	1인당 GDP	4만9,965 달러
3조8,700억 달러	전체 무역액	3조8,200억 달러
3조3,000억 달러	외환보유액	1,480억 달러
1,024억 달러	국방예산	6,457억 달러
1척	항공모함	11척
2백28만5천명	전체병력	1백58만2백55명

출처: World Bank, United States Census Bureau, CIA's the World Factbook, IMF.

물론 미국에게 중국의 부상은 위협인 동시에 기회를 제공하는 요인이기도 하다. 미국은 신흥강대국으로 등장한 중국과 협력하여 다양한 국제 현안에 대해 공동의 책임을 짐으로써 이제까지 국제문제 해결에서 미국이 혼자 짊어지던 부담과 비용을 줄이고자 한다. 미국이 중국에게 요구하는 “책임있는 이해상관자”(responsible stakeholder)다운 행동이라는 것은 바로 이러한 의도를 반영하는 것이다. 실제로 미국 입장에서는 세계화 시대 ‘G2’의 지위에 올라선 중국과 ‘동반자’로서 상호 협력 해야 하는 사안들이 급증하고 있다. 미국은 이제 중국의 협조 없이는 세계금융위기의 극복이나 북한 핵문제 그리고 기후변화와 환경문제 등 국제사회의 주요 이슈를 해결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이 때문에 2009년 7월 27일 제1차 미중 전략경제대화(U.S.-China S&ED) 개막연설에서 오바마 대통령은 “미·중관계는 21세기를 만들어 가는 데 있어서 그 어떤 양자관계보다도 중요하다”고 했으며, 당시 국무장관이었던 클린턴(Hillary Clinton)과 재무장관이었던 가이트너(Timothy Geithner)는 “미국이나 중국이 단독으로 해결할 수 있는 지구적 문제는 거의 없지만 미국과 중국이 함께 한다면 지구상에 해결할 수 없는 문제는 없다”고 주장했다(Clinton and Geithner 2009).

그러나 중국의 종합국력 증대 및 그에 따른 책임 및 역할 확대는 중국의 영향력을 증대시키고 주요 국제사안에 대한 중국의 목소리를 키움으로써 중국이 미국 주도의 국제질서에 도전하는 것으로 비춰지기도 한다. 왜냐하면 중국의 종합국력이 성장할수록 미·중 간 세력경쟁은 치열해질 수밖에 없으며, 상호 마찰과 대립의 이슈 영역도 그만큼 증대되기 때문이다. 미국과 중국은 비록 공개적으로 표명하지는 않지만 사실상 서로가 상대방의 기본이익을 위협하는 전략적 목표를 지니고 있다. 미국은 평화적이고 점진적인 방식을 채택하고는 있지만 궁극적으로 중국이 서구식의 자유민주주의를 수용하는 방향으로 발전해 나



가야 한다고 생각한다. 반면에 중국지도부는 공산당지배체제를 근본적으로 바꿀 생각이 없으며, 체제변환을 요구하는 미국이 중국이 당면한 가장 심각한 외부위협을 제기한다고 본다. 따라서 중국은 서태평양 지역에서 미국의 군사력과 외교적 영향력을 억제하는 한편 궁극적으로는 동아시아에서 미국을 대체하는 주도세력이 되고자 한다.

다행스러운 것은 미국과 중국이 근본적인 지배이념과 정치체제의 차이 그리고 지정학적 대립의 구조 속에서도 사실상 최대한 충돌을 피하고자 한다는 점이다. 중국은 경제 성장에 정책적 최우선 순위를 줌으로써 미국과의 직접 충돌을 피하고자 한다. 왜냐하면, 미국과의 충돌은 자신들이 추구하고 있는 ‘전면적 소강사회건설’과 ‘중화민족의 위대한 부흥’이라는 국가목표 달성에 부정적으로 영향을 줄 것이 명확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중국은 개혁개방초기부터 미국과 “상호이해를 증진시키고 공통인식의 부분을 확대하며 협력관계를 발전시켜 미래를 함께 창조한다”(增進了解, 擴大共識, 發展合作, 共創未來)는 방침을 강조해 왔다(陶堅 1998, 10). 그리고 오늘날 시진핑 시대의 중국은 대미관계에서 이른바 ‘신형대국관계’를 주장하고 있는데 외교부장인 왕이(王毅)의 설명에 따르면 이는 “새로이 부상하는 강대국과 기성 강대국이 전쟁 같은 직접적 충돌을 통해 국제질서가 재편됐던 역사의 굴레에서 벗어나 두 주요 강대국이 협력의 기반 위에서 공정경쟁을 통해 세계의 평화적 발전을 이뤄나가자”는 개념을 담고 있다(王毅 2013, 4).

한편 미국의 경우에도 중국과 충돌하기보다는 협력을 통해 상호 윈-윈하는 미래상을 강조하고 있다. 일례로 힐러리 클린턴 전 국무장관은 닉슨 대통령의 중국방문 40주년을 기념하여 2012년 3월 7일 미국평화연구소(United States Institute of Peace)에서 행한 연설에서 “중국은 소련이 아니고, 미중 양국은 냉전으로 돌아가서는 안 되며, 양국은 경쟁과 협력 사이에서 가장 이상적인 균형을 실현하는 대국관계”라고 규정한다. 나아가 클린턴은 “역사적으로 기성대국에 신흥대국이 도전하면 반드시 전쟁이 일어났으나 우리는 처음으로 적대관계나 전쟁이 되지 않는 새로운 역사를 써야 하고 또 쓸 수 있다”고 역설했다(Clinton March/7/2012). 비록 기존 강대국과 신흥 강대국 사이에 세력전을 둘러싼 충돌의 역사적 사례가 빈번하다 하더라도 이처럼 미국과 중국이 상호 충돌을 회피하고자 하는 강한 의지를 공표하고 있다는 점은 21세기 국제질서의 변환이 새로운 방식으로 이루어질 수도 있다는 희망을 갖게 하는 요소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현실적으로 미·중관계가 한·미, 미·일 관계보다 구조적이고 역학적으로 훨씬 더 취약하고 복잡한 성격을 지니고 있다는 점을 부정할 수 없다. 중국은 동아시아를 중심으로 하는 아시아지역에서의 주도권을 장악하는 것이 자국의 미래상에 있어서 관건이라 보고 있으며, 미국은 결코 아시아·태평양 지역에서의 주도권을 중국에 넘길 생각이 없어 보이기 때문이다. 오바마 행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아시아로의 회귀”(pivot to Asia) 또는 재균형 정책은 미국의 이러한 의도를 대변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반면 중국은 이른바 “반접근/지역거부”(Anti-Access/Area-Denial: A2/AD) 전략에 근거하여 미국의 대 아시아 개입을 최대한 차단하거나 거부하려 들고 있다(김성걸 2012, 42-67).

그런데 미중 양국의 갈등과 협력은 단순히 양자관계의 범위를 넘어서 지역적, 세계적으로도 매우 커다란 파급영향을 미치는 사안이다. 이러한 사실은 오늘날 미국과 중국 모두 상대방에 대한 전략을 수립하는데 있어서 그 중요성과 어려움이 지속적으로 증대되고 있음을 의미한다. 아울러 미·중관계에는 사회구조와 성격 차원에서 다양한 정치·경제·사회문화이슈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하고 있기 때문에 단선적 전략으로는 양국관계를 풀어가기 어려운 상황에 빠져들고 있다. 그만큼 서로를 상대하는 것이 갈수록 어려워지고 있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냉전시대 미국의 대 소련전략은 안보문제에 그 중점이 있었던 반면 오늘날 중국에 대한 전략은 군사안보와 경제이슈는 물론이고 인권과 민주화 등 훨씬 더 다양한 사안들에 대한 고려가 동시에 작동하고 있다.

결국 오늘날 미국과 중국의 양자관계는 갈등과 경쟁의 구조를 바탕으로 현실적 필요에 의한 협력을 추구하고 있으며 이는 갈등과 협력의 혼재로 특징지어진다고 하겠다. 미국과 중국은 국제질서에 대한 ‘동



상이몽'의 전략적 고려가 작용하고 있으며, 동아시아를 중심으로 하는 아시아-태평양지역에서 주도권 경쟁을 피하기 어려운 것이다. 문제는 향후 21세기의 미·중관계가 경쟁보다 협력의 방향으로 이동해 나갈 수 있을 것인가 하는 점이다. 이를 위해서는 키신저(Henry Kissinger)도 지적한 바와 같이 미·중 양국이 통상적인 갈등과 협력 이슈에 대해 상호 대화하고 공동이익을 추구하는 것이 필요하며, 또한 전 세계적인 차원에서의 비전을 공유함과 동시에 지역 갈등이나 긴장 해소를 위해 양자 수준을 넘어서는 위기관리 차원의 포괄적 협의를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Kissinger 2011, 526-530). 그럴 때 비로소 미·중관계는 갈등과 대결의 구조를 벗어나 새로운 공동진화(co-evolution)의 구조를 만들어갈 수 있을 것이다.

### III. 중국의 대외전략 변화와 신형대국관계

#### 1. 개혁개방시기 중국의 대외전략 변화

개혁개방시기 중국지도부는 그들만의 독특하고 주목되는 방침(方針)을 통해서 각자의 독자적인 대외정책을 제시하거나 추진하고는 했다. 덩샤오핑(鄧小平)은 물론이고 장쩌민(江澤民), 후진타오(胡錦濤) 그리고 시진핑(習近平)에 이르기까지 각 지도부는 그들만의 수사(rhetoric)로 포장된 대외정책을 강조함으로써 독창적인 특징을 나타내었던 것이다. 그 중에서도 오늘날까지 가장 널리 회자되고 있는 것이 바로 “도광양희”(韜光養晦), “유소작위”(有所作爲)라고 하겠다. 중국의 주요 지도자와 중국특색의 제법(提法)을 기준으로 개혁개방시기 중국의 대외전략 변화를 평가하자면 다음과 같이 설명할 수 있다.

먼저 1980년대 덩샤오핑 시기의 대외전략은 도광양희로 대변된다. 도광양희는 천안문 사건 이후 1991년 덩샤오핑이 중국의 최고지도층에 전달한 “20자 방침”의 하나이다.<sup>5</sup> 덩샤오핑 20자 방침의 핵심은 “미국을 비롯한 외부세력과 충돌을 피하고(避免衝突), 종합국력의 발전에 힘쓰며(發展綜合國力), 안정적 발전을 추구해 간다(逐步發展)”로 요약할 수 있다. 덩샤오핑 시기의 대외정책은 나름대로의 안보관과 책략을 함유하고 있었지만 “빛을 감추고 은밀하게 힘을 기른다”(韜光養晦)는 뜻에서 나타나듯이 비교적 피동적이고 방어적인 경향에 치우쳐 있었다. 다시 말해 덩샤오핑 시기의 중국은 경제발전을 통한 종합국력의 배양을 우선시하는 한편 대외적으로는 미국, 소련과 외교적 갈등을 최소화하고, 내부 발전에 치중하기 위한 외교 전략을 수립하고 있었던 것이다. 이는 다분히 실용주의적이면서도 고립주의적인 대외정책의 성격을 지니는 것이라고 평가할 수 있다.

중국이 국력성장에 따른 자신감을 바탕으로 대외전략과 외교정책을 보다 구체화하기 시작한 것은 장쩌민 시기에 들어서부터라 할 수 있다. 장쩌민 시기 중국은 대내적으로는 ‘6·4 천안문사건,’ 대외적으로는 냉전체제 종료 등으로 말미암아 덩샤오핑 시기와는 다른 ‘도전’과 ‘기회’에 직면하게 되었다. 장쩌민 시기 중국에서는 천안문 사건 이후 미국을 위시한 서방세계의 제재와 ‘중국위협론’의 대두 속에서 미국의 봉쇄(圍堵)전략에 대한 우려감이 고조되었다. 장쩌민은 이를 해소하기 위한 외교 전략으로서 “강대국 관건, 주변국 우선, 개발도상국 기초, 다자주의를 중요무대로(大國是關鍵, 周邊是首要, 發展中國家是基礎, 多邊是重要舞臺)”라고 하는 방침을 제시하였다. 그리고 이를 바탕으로 덩샤오핑 시기에 비해 상대적으로 더 적극적이고 주도적으로 대외정책을 전개하고 국제사회 문제에 참여하고자 했다.

한편 장쩌민 시기 중국의 대외정책을 대표하는 키워드는 “책임대국”(責任大國)이라 할 수 있다(한석희 2004, 191-210; 이동률 2006, 344-376; 肖歡容2003). 중국에서 1990년대 중반부터 등장한 책임대국론은 종합국력의 신장에 대한 자신감을 바탕으로 중국부상에 대한 국제사회의 우려와 견제를 최소화하



고 강대국으로서 중국의 영향력을 확보하려는 목적을 담고 있었다. 탕자쉬엔(唐家璇) 전 외교부장은 장쩌민 집권 시기의 외교를 평가하면서 중국이 국제사회에서 책임감 있는 대국의 면모를 과시한 대표적 사례의 하나로 1997년 동아시아 금융위기 당시의 역할을 지적하고 있다(唐家璇 2003). 동아시아 금융위기 당시 중국은 위안화의 평가절하를 유보하고 태국 등 동남아국가에 대해 금융지원을 제공함으로써 국제사회에 공공재를 제공하는 책임대국의 모습을 시현했다는 것이다. 동아시아 금융위기는 중국의 힘을 각인시켜 주는 계기가 되었고, 국제사회는 중국을 아시아의 강대국으로 인정하기 시작했다.

나아가 장쩌민 시기의 중국외교는 덩샤오핑이 강조했던 도광양회 기초에서 벗어나 “필요한 역할은 한다”는 초보적 수준의 ‘유소작위’로 변신을 시도했다. 장쩌민 시기의 중국은 미국을 비롯한 서구세계에 대해 본격적으로 ‘노’(No)를 외치기 시작했다. 이 과정에서 중국은 ‘신안보관’을 내세우며 중국적 군사안보의 새로운 규범을 제시하고자 했으며, ‘보아오 아시아포럼’과 ‘상하이협력기구(Shanghai Cooperation Organisation: SCO)’ 등을 주도적으로 창설하여 국제무대에서의 의제설정을 주도하고 새로운 규범을 제시하는 역할을 수행하고자 했다. 그러나 장쩌민 시기 중국의 ‘유소작위’ 시도는 현실적으로 미국의 견제에 대한 부담과 국내정치적으로 광범위한 동의를 이끌어내지 못함으로써 본격화되지는 못한 측면이 있다. 때문에 장쩌민 시기의 중국은 기존 패권국인 미국과 직접적으로 충돌하는 것은 피하고, 국제사회의 ‘중국위협론’을 불식시키면서 자국의 부상을 현실화하는 데 총력을 기울이게 되었다.

후진타오 시기 중국의 대외전략은 “평화발전”(和平發展)과 “조화세계”(和諧世界)로 대표된다. 후진타오 체제는 지속적인 경제 현대화와 국내적 안정을 통한 강대국으로의 부상이라는 과제를 안고 등장하였다. 이 과정에서 서구세계와 주변국의 ‘중국 위협론’에 대응하는 한편 자국의 부상이 평화적으로 이루어지고 중국이 계속해서 국제적 책임을 다할 것이라는 점을 강조하기 위한 전략적 논리 개발의 필요성이 대두하였다. 그 결과 중국지도부는 2003년 “화평굴기”(和平崛起) 개념을 제시하였지만 이는 2004년부터 “화평발전”으로 대체되었다.<sup>6</sup> 이후 후진타오 지도부는 일관되게 화평발전을 강조해 왔으며 2011년에는 그 개념을 종합적으로 정리하고 논리화하여 <화평발전백서>를 펴내기도 했다(中國國務院辦公室 2011).

후진타오는 평화발전과 더불어 “조화세계” 이념을 대외정책의 키워드로 강조하였다. 후진타오는 2005년 9월 유엔(United Nations: UN)창설 60주년 정상회의 연설에서 “지속적인 평화와 공동번영의 ‘조화세계’를 구축하겠다”는 대외정책 비전을 제시하였다. 그는 “조화세계의 구축은 다자주의를 견지하고, 공동안보를 실현하며, 호혜협력을 견지함으로써 세계의 공동번영을 실현하고, 포용정신을 바탕으로 문명간의 대화를 실현하는 것을 의미 한다”고 주장하였다(中國人民共和國外交部 2005). 즉, 조화세계론은 각국이 평화와 협력을 적극적으로 모색해 영구평화와 공동번영을 실현하자는 것으로 요약할 수 있다. 이후 조화세계론은 17차 당 대회 공작보고는 물론 시진핑 체제가 출범하는 18차 당 대회 공작보고에도 그 내용이 포함되는 등 후진타오 시기 대외정책의 주요 이념이자 목표로서 작용하였다.

한편 후진타오 시기 국력 증대와 맞물려 중국의 국가이익이 전 세계적 범위에 걸쳐 확산되면서 이를 수호하기 위한 중국 정부의 부담도 그 만큼 증대되었다. 이에 따라 후진타오 지도부는 양보나 타협의 대상이 될 수 없는 국가이익의 영역으로 “핵심이익”(核心利益, core interest) 개념을 강조하기 시작했다. 그러나 중국 정부가 규정하는 핵심이익은 주권, 안보, 영토보전, 통일뿐 아니라 정치제도, 사회 안정, 그리고 경제발전까지 포함하는 상당히 포괄적으로 규정되고 있다.<sup>7</sup> 중국정부가 규정하는 핵심이익의 개념이 대체로 모호한 것은 어찌하면 그것의 개념과 범위를 구체화 하는 데 따르는 마찰과 논란의 가능성을 최대한 배제하고 반면 해석의 융통성에 따른 외교적 선택과 행위의 유연성은 최대화하려는 전략적 의도로 평가된다.

오늘날 중국 지도부가 견지하는 ‘핵심이익’에 대한 강조와 군사력 증강 및 국제적 영향력 확대 의지





는 당분간 중단되거나 포기될 수 있는 사안이 아니다. 이는 급속히 확대되는 다양한 중국의 국제적 이익을 보호하고, 동아시아지역에서 힘의 우위를 바탕으로 주도권을 확보하며, 미국의 전략적 개입에 대응하기 위한 목적을 지니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러한 중국지도부의 안보전략과 대외정책은 ‘화평발전’과 ‘조화세계’라고 하는 대외정책 기조에도 불구하고 어떤 면에서는 동아시아 국제질서에 근본적 도전을 안겨주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실제로 중국의 군사안보전략과 공세적 대외정책은 갈수록 미국과 전략적 긴장 관계를 고조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기도 한다. 따라서 시진핑 체제는 이러한 미·중 간 긴장과 갈등의 파고를 헤쳐 나가야 하는 과제를 안고서 출범했다고도 볼 수 있다.

## 2. 시진핑시기 신형대국관계의 등장

시진핑 지도부의 대외정책은 전임 후진타오 지도부에 비해 보다 큰 자신감을 가지고 G2의 위상에 걸맞은 국제적 책임과 역할을 추구하고자 한다. 그러나 이를 위해서는 먼저 대내적 지지와 단결이 선결되어야 하며 대외관계의 가장 중요한 핵심변수인 대미관계의 안정적 유지가 필요하다. 그리고 이와 동시에 후진타오 시기부터 강조해 온 중국의 핵심이익에 대한 수호 의지와 행동이 수반되어야만 한다. 때문에 시진핑은 “중국의 꿈”(中國夢)이라는 비전을 제시하며 대내적 국민통합을 추동하고, “신형대국관계”(新型大國關係)라는 대국외교의 틀을 제시함으로써 미·중관계의 안정화를 꾀하고자 한다. 그리고 이와 동시에 ‘핵심이익’ 원칙에 대해서는 포기하지 않겠다는 강한 의지를 내보이고 있다.<sup>8</sup>

특히 시진핑 체제 하 미·중관계와 관련하여 우리의 관심을 끄는 것은 중국이 주장하는 이른바 ‘신형대국관계’라는 개념이다. 시진핑은 국가부주석 시절이던 2012년 2월 미국 방문에서 신형대국관계의 주요 내용을 설명한 바 있는데 그것은 첫째, 상호이해증진과 전략적 신뢰구축, 둘째, 상호 ‘핵심이익’과 중대 관심 사안에 대한 존중, 셋째, 호혜공영구조의 심화노력, 넷째, 국제 및 지구적 사안에 대한 부단한 협력강화 등을 중심으로 하는 것이었다(中國國際廣播電台 2012). 중국의 신형대국관계 수립에 대한 주장은 시진핑에 의해 처음으로 공식화된 이후 2012년 5월 제4차 미중 전략경제대화(Strategic and Economic Dialogue: S&ED)와 동년 6월 G20 정상회의 당시 개최된 미·중 정상회담에서 후진타오 전 주석에 의해서도 재차 강조되었다. 그리고 2012년 11월 8일 후진타오가 발표한 제18차 중국공산당 전국대표대회 정치보고에서는 “신진국과의 관계를 개선 및 발전시키고, 협력분야를 확대하며, 갈등을 원만하게 처리하여 장기적이고 안정적이며 건강하게 발전하는 ‘새로운 대국관계’ 수립을 추진할 것”이라고 밝히고 있다(胡錦濤 2012). 중국이 말하는 ‘새로운 대국관계’는 대 유럽연합(European Union: EU)관계, 대일관계 등을 포함하지만 그 핵심은 사실 대미관계에 놓여있는 것이다.

이후 중국 최고 지도자가 되어 오바마 대통령과 다시 만난 2013년 6월 캘리포니아 정상회담에서 시진핑은 재차 미중간 신형대국관계의 수립을 강조하였다. 시진핑은 “중·미 양국이 태평양을 초월한 협력을 추진하고, 군사관계 증진 등 새로운 사고와 적극적인 행동을 통해서 신형대국관계를 형성하자”고 주장했던 것이다. 당시 시진핑이 개괄한 신형대국관계는 세 가지로 요약할 수 있는데, 첫째, 상호 충돌하거나 대립하지 않으며(不衝突, 不對抗), 둘째, 서로 존중하고(相互尊重), 셋째, 협력하고 윈-윈하는(合作共贏) 양국관계를 만들어 간다는 것이다.

그리고 실천적 측면에서 시진핑은 미중 양국간 신형대국관계의 구축을 위한 방법으로 네 가지를 제시하였다. 첫째, 양국간 대화와 상호신뢰의 수준을 새로운 단계로 높이는 것으로서 이를 위해 G20,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sia-Pacific Economic Cooperation: APEC) 등 다자회의에서 양국 정상간의 대화를 제도화하고, 현존하는 약 90여 개의 정부간 대화 채널을 충분히 활용하자는 것이다. 둘째, 실속 있는



협력이 이뤄지는 새로운 국면을 열자는 것으로서 이에 대해 중국은 첨단기술제품의 대중수출제한 완화 등의 문제에서 미국이 적극적인 조치를 취하고 양국간 무역과 투자구조를 좀 더 균형 잡힌 방향으로 발전시킬 것을 제시한다. 셋째, 대국간 상호작용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세우자는 것으로서 이는 한반도, 아프가니스탄 등 국제 및 지역의 분쟁지점(hot spot)에서의 긴밀한 협조와 협력을 유지하고, 해적소탕, 국제범죄, 평화유지활동, 재난방지, 사이버안전, 기후변화, 우주안전 등 영역에서 협력을 강화하자는 것이다. 넷째, 상호 이권을 관리 및 통제하는 새로운 방법을 모색하고, 미·중 신형대국관계에 걸맞은 신형군사관계를 적극 구축하자는 것이다(中国人民共和国外交部 2013).

2013년 6월 미·중 정상회담은 시진핑이 최고지도자 지위에 오른 이후 처음 열린 것으로서 양국은 ‘새로운 관계’ 설정이라는 큰 틀에서 상호 관심사들을 폭넓게 논의한 자리였다. 양국정상은 회담 후 공동성명을 발표하지 않고 양제츠(杨洁篪) 외교담당 국무위원과 톰 도닐런(Thomas Donilon)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이 각각 회담내용을 브리핑하는 형식으로 회담내용을 설명하였다. 그러나 정상회담의 내용을 설명하면서 중국 측은 대부분을 ‘신형대국관계’에 초점을 맞춘 반면 미국 측은 양국이 군사관계, 경제관계, 사이버안보, 북핵문제 등 다양한 사안에 관해 논의한 내용에 초점을 맞추어 설명했던 것을 보면 양국의 주요 관심 사안에 대한 차이를 발견할 수 있다.

시진핑 지도부가 신형대국관계를 특별히 강조하고 있는 것은 오바마 행정부가 미국의 ‘아시아 회귀’를 선언하고, 중국에 대한 군사·외교적 견제를 강화하는 최근의 상황이 배경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점을 이해할 필요가 있다. 중국으로서는 주도적으로 미·중관계의 새로운 발전방향을 제시하고 과거 역사에서 보여진 갈등과 마찰로 점철된 기존의 강대국관계와 다른 협력적 관계를 만들어 가야 할 필요가 있었다. 중국의 국력상승과 경제발전에 따른 핵심이익을 수호하고, 안정적으로 계속 힘을 키워 나가기 위해서는 가능한 미국의 견제를 우회하고 충돌을 최소화하는 것이 필요한 것이다. 시진핑 지도부의 이러한 입장은 이후 왕이(王毅) 외교부장의 9월 브루킹스연구소(Brookings Institution) 연설에서 미국에 대한 “상호 소통과 협력을 강화하고, 상호 존중하는 가운데 책임의 공동분담 및 도전요인에 대한 공동대응을 통해서 상호 윈-윈(win-win)하는 양국관계를 만들어가자”(Wang Yi 2013)고 강조한 것에서도 잘 드러난다.

이와 더불어 시진핑 시기 들어 중국이 신형대국관계 수립을 주장하고 나선 데에는 종합국력의 상승과 외부환경의 변화에 대한 대응의 측면이 작용한다고 볼 수 있다. 국제사회에서 자국의 위상이 높아짐에 따라 중국은 그에 따른 역할 조정 및 대미관계 재정립의 필요성을 느끼게 된 것인데 여기에는 미국과 새로운 관계 설정을 주도적으로 제의할 수 있을 만큼 국력에 대한 자신감이 붙었을 뿐 아니라 이를 조성할 수 있는 외부환경도 성숙되었다는 판단이 작용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이는 중국이 이제 스스로에 대한 정체성을 단순한 ‘대국’이 아닌 ‘강대국’으로 규정해 가고 있으며, 미국을 넘어선 초강대국으로 성장할 수 있는 가능성도 염두에 두고 있음을 시사하는 것이다. 요컨대, 중국의 미국에 대한 신형대국관계 수립 제의는 능력이 수반된 의지의 표현으로써 모종의 자신감과 함께 현실적 필요성을 반영한 중국의 거시적 대미전략이라 할 수 있다.

한편 비록 중국의 관심과 기대에 비할 정도는 아니지만 신형대국관계에 대해 미국도 일단은 호응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힐러리 클린턴 전 국무장관은 2012년 3월 7일 워싱턴의 평화연구소(Peace Institute) 연설에서 “역사적으로 기성대국(established power)에 신흥대국(rising power)이 도전하면 반드시 전쟁이 일어났으나 미국과 중국은 처음으로 적대관계나 전쟁이 되지 않는 새로운 역사를 써야 하고 또 쓸 수 있다”고 역설했다. 또한 지난 6월 미중 정상회담에서 오바마 대통령도 “중국의 지속적이고 평화로운 강대국 부상을 환영하며 새로운 유형의 관계 형성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미국의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신형대국관계’의 내용과 개념에 대해서 구체적이지 못하고 뚜렷한 목적을 염두에 둔 것이 아니며, 임기응변적이라고 보는 시각도 존재한다(Cronin 2013). 또한 미국이 생각하는 신형대국



관계는 주로 양국이 직면하고 있는 군사, 경제, 사이버안보 등 당면한 국제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협력을 모색하는 데 우선적 초점이 맞춰져 있는 것으로 보인다.

미국은 중국이 강대국으로서 국제사회에 대한 책임을 다하고 국제규범에 부합하는 행위를 통해 새로운 양국관계의 모범을 보이기를 원하는지도 모른다. 이는 ‘핵심이익’의 존중 및 상호 평등한 관계에 대한 수용을 전제로 하는 중국의 신형대국관계 요구와는 분명 차이가 있을 수 있다. 만일 미국이 중국의 신형대국관계를 수용한다면 중국이 자국의 영토로 주장하는 조어도(센카쿠 열도)문제는 물론이고 심지어 남중국해 문제에서도 중국의 주장과 입장을 존중해야만 한다. 그러나 미국이 이러한 문제와 관련하여 중국에게 양보하거나 중국의 주장을 수용할 기미는 전혀 보이지 않는다. 따라서 미국이 과연 중국이 주창하는 신형대국관계 제안을 수용하기로 결심하고 이에 기초하여 중국과 더불어 21세기 새로운 국제질서를 정립해 나가기로 한 것인가에 대해서는 보다 신중한 해석이 요구된다.

## IV. 미·중 주도의 복합동아시아 질서

### 1. 동아시아를 둘러싼 미·중 경쟁의 양상

최근 동아시아지역 전체의 추세를 주도하는 두 가지 흐름은 중국의 공세적 부상과 미국의 주도적 역할 지속을 위한 노력이라 할 수 있다. 미국은 동아시아에서 그동안 패권적 지배자로 군림해 왔으며 그 과정에서 미일동맹은 동아시아지역 안보질서의 초석으로 작동했고, 미국 주도의 다양한 무역과 투자협정관계는 경제질서의 토대로 작용해 왔다(Ikenberry 2008, 21). 그러나 최근 들어 이러한 미국의 주도적 영향력과 질서체제는 중국의 부상과 더불어 흔들리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결국 동아시아에는 미국 주도의 지역 질서가 현존하고 있지만 중국의 부상과 더불어 대전환기에 접어들고 있는 것이다.

그 결과 오늘날의 동아시아 안보정세는 ‘불확실성’으로 대표되는 특징을 지니고 있다. 그런데 이러한 불확실성의 가장 중요한 원인은 미·중관계의 불안정성에서 비롯된다고 볼 수 있다. 현재 미국은 정치, 경제, 군사 등 모든 분야에 있어 세계 제1의 강대국 지위를 누리고 있지만 미국의 잠재적 경쟁국으로 중국이 지목되고 있는 것은 자타가 공인하는 사실이다. 또한 현재 중국은 역내에서 교역 확대, 에너지 확보, 군비 축소문제, 북한 핵문제, 영토분쟁 등과 관련하여 가능하면 미국의 규제를 받지 않고 배타적으로 국익을 추구하고자 한다. 따라서 동아시아 안보질서는 중국과 미국의 관계 속에서 새롭게 형성될 것이며, 미국은 그만큼 적극적으로 중국에 대한 견제에 나설 가능성이 높다.

미국의 대중국 견제는 오바마 정부 들어서 추진되고 있는 아태지역에 대한 개입정책을 통해서 가시화되는 추세이다. 오바마는 2011년 11월 17일 동아시아정상회의(East Asia Summit: EAS) 참석 차 방문한 호주 의회 연설에서 “아시아·태평양 지역을 미국 외교안보정책의 최우선 순위에 두겠다”고 천명했으며 이후 2001년 9·11테러사건을 계기로 중동지역에 쏟았던 미국의 외교역량과 군사력을 아시아로 급속히 이동시키고 있다. 이와 같은 미국의 태도는 오바마 1기에서 보이던 중국에 대한 포용(engagement)정책으로부터 ‘견제’내지는 ‘헤징(hedging)’으로의 전략적 전환을 의미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Friedberg 2012, 31).

동아시아를 둘러싼 미국과 중국의 경쟁양상은 이슈와 영역을 달리하며 나타나고 있는데 그 대표적인 사례로는 남중국해문제, 센카쿠(조어도)문제, 북핵문제 등을 들 수 있다. 2011년 중국 해양순시선은 리드뱅크(Reed Bank) 지역에서 지질조사를 수행하던 필리핀 선박에 물리적인 공격을 가했으며, 남중국



해에서 석유탐사를 하던 베트남 선박에 연결된 케이블을 절단하여 중국과 베트남간의 긴장을 고조시켰다(Lawrence and MacDonald 2012, 11-12). 또한 중국은 2010년 9월 센카쿠(조어도)열도 주변에서 발생한 일본 해상보안청 순시선과 중국어선의 충돌사건 및 2012년 7월 일본정부의 센카쿠(조어도) 국유화조치 발표 등과 관련하여 일본과 한 치의 양보도 없는 해상영유권 분쟁을 벌이고 있다. 중국이 2013년 11월 방공식별구역(Air Defense Identification Zone: ADIZ)을 일방적으로 선포한 것도 결국은 중일간 센카쿠(조어도)문제로 인한 갈등이 첨예화되면서 중국이 주장하는 ‘핵심이익’ 수호 차원에서 이뤄진 조치의 하나로 볼 수 있다.

후진타오 집권 후반기부터 시작된 핵심이익의 강조와 더불어 중국의 군사력 증강 및 공세적 외교형태의 등장도 다시금 국제사회에 ‘중국위협론’을 비등(沸騰)하게 만들고, 미·중관계의 대립을 가져온 측면이 있다.<sup>9</sup> 중국은 화평발전과 조화세계를 강조하면서도 2010년 이후 격화되기 시작한 ‘조어도(센카쿠) 분쟁’과 ‘남중국해 분쟁’의 사례에서 보듯 부분적으로는 주변국에 대한 압박과 위협을 서슴지 않고, 미국에 대해서도 평등한 대우를 요구하는 경우가 많아졌다. 반면 미국은 조어도(센카쿠)가 일본의 관할권에 속하며, 남중국해 역시 ‘항행의 자유’가 보장되어야만 한다고 강조했다.<sup>10</sup> 또한 중국의 공세적 행동은 남사군도 영유권을 두고 분쟁을 벌이던 베트남과 필리핀으로 하여금 미국과 군사관계를 강화함으로써 중국의 압력에 공동 대응하도록 만들었으며, 결과적으로 동아시아지역에 대한 미국의 개입을 강화시켰다.

문제는 동아시아에서 점증하는 중국의 영향력과 공세적 행동이 중국과 일본 또는 중국과 주변국의 갈등으로 한정되는 것이 아니라 미국과의 갈등으로 확산되는 양상을 보인다는 사실이다. 일례로 일본의 센카쿠(조어도) 국유화 결정으로 중국과의 갈등이 고조되던 2012년 7월에도 빅토리아 놀랜드(Victoria Nuland) 미 국무부 대변인은 “센카쿠 열도는 미일안보조약 제5조의 적용범위에 포함되며 1972년 오키나와 반환 이래 센카쿠 열도는 일본정부의 통제 아래 있다”고 발표했다(〈讀賣新聞〉 2012/07/10). 미국의 이러한 태도는 미국에 대한 중국의 불신과 경계심을 고조시켰으며, 센카쿠 문제가 단순히 중·일간의 영토 분쟁 문제가 아니라 미·중 간의 심각한 잠재적 갈등사안으로 그 성격이 변모하는 양상에 접어들게 했다.

실상 동아시아지역을 둘러싼 미·중간의 긴장과 갈등은 2010년 초부터 본격화되었다고 볼 수 있다. 2010년 초 미·중갈등의 출발점은 세계 최대의 검색엔진인 구글(Google)과 중국의 사이버분쟁으로 촉발되었다. 그리고 같은 해 1월에 미국 국방부가 대만에 대한 64억 달러의 무기판매 결정을 발표하면서 양국간 마찰은 더욱 격화되었으며, 이후 미·중관계는 백악관의 달라이 라마 면담문제, 중국의 군사력 투명성 문제, 환율 및 통상문제로까지 확대되면서 2010년 내내 양국간 난타전 양상으로 진행되 바 있다.<sup>11</sup> 2011년 1월 후진타오 주석의 미국 방문은 2010년 내내 벌어진 미·중 갈등을 봉합하고 양국간 전략적 협력의 새로운 방향을 모색하기 위한 것이었다고 볼 수 있다. 당시 미·중 정상회담을 통해 중국은 “세계의 어떠한 문제도 미·중간 협의 없이는 해결하기 어렵다”는 점을 국제사회에 각인시킴으로써 명실상부한 ‘G2’ 국가로서 그 위상을 과시한 측면이 있다.

그러나 미·중관계는 2011년 하반기 오바마 대통령이 미국의 ‘아시아 귀환’을 선언하고 이른바 아시아회귀정책(pivot to Asia) 또는 재균형 정책이 본격화되면서 다시금 ‘전략적 불신’의 후유증이 되살아나기 시작했다. 외교안보뿐 아니라 경제 분야에서도 미국의 아시아 관여 및 대 중국 견제는 적극적으로 진행되고 있다. 미국은 한국과 자유무역협정(Free Trade Agreement: FTA) 협상 타결에 이어 미국 주도의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rans-Pacific Partnership: TPP) 협상에 일본과 캐나다, 멕시코의 협상 참여 선언을 이끌어냄으로써 경제적으로도 대중(對中) 포위망을 좁혀가고 있다. 2010년 11월 13일 폐막된 APEC 회의에서 미국은 12개국을 끌어들이어 TPP를 공식화했다. 중국을 배제한 가운데 고도의 자유무역협정 TPP를 밀고 나가는 것이다.

중국은 경제적 측면에서 TPP에 대항하기 위해 아세안(Association of South East Asian Nations:



ASEAN) 10개국 및 아세안과 FTA를 체결한 6개국을 포함한 총 16개국이 참여하는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egional Comprehensive Economic Partnership: RCEP)을 주도하고 있다. 외교적으로는 시진핑 지도부 등장 이후 적극적인 주변국외교에 나서고 있다. 예를 들어 왕이(王毅) 외교부장은 2013년 4월 말 취임 이후 첫 방문지로 태국, 인도네시아, 싱가포르, 브루나이 등 동남아 4개국을 순방했다. 시진핑 주석은 10월 초 인도네시아 발리에서 열린 APEC 정상회의에 참가하였으며, 연이어 브루나이에서 열린 동아시아정상회의(EAS)에는 리커창 총리가 참가하여 중국의 이미지를 제고하고 동남아관계를 강화하는데 총력을 펼쳤다. 또한 중국은 2013년 10월 24-25일 베이징에서 양일간 당 중앙정치국 간부와 외교부문 간부는 물론 지방정부 간부와 국영기업 간부들까지 참여하는 대규모의 <주변외교공작좌담회>(周邊外交業務座談會)를 특별 개최하기도 했다.<sup>12</sup>

결국 최근 동아시아를 둘러싼 미국과 중국의 경쟁은 두 가지 핵심 이슈를 중심으로 진행되고 있다고 하겠다. 하나는 남중국해와 센카쿠(조어도) 영유권분쟁에 대한 쌍방의 적극적 관여와 대응이고, 다른 하나는 환태평양동반자협정(TPP)과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으로 대표되는 경제주도권의 확보에 관한 것이다. 이 두 가지는 서로가 상대방을 배제하거나 경계하려는 전략의 일환이며 특히 중국에게 있어서 이는 소위 ‘핵심이익’과 관련된 것으로서 양보와 타협의 대상이 되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 따라서 중국으로서는 미국의 견제와 봉쇄를 뚫고 자국 주도의 동아시아질서를 만들어 나가야 하는 중대한 과제에 직면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주목되는 것은 과연 중국이 그 동안 강조해온 ‘평화발전’의 틀을 유지하여 미국과의 충돌은 피하면서 ‘핵심이익’을 수호하고 동아시아의 주도적 세력으로 등장할 수 있을 것인가 하는 점이다.

**[표 2] 미국과 중국의 아태지역 패권경쟁 양상**

미국	경쟁영역	중국
아태지역에 대한 최우선 고려를 선언. 중국영향력 차단, 미국의 경제·군사적 우위 유지	기본입장	G2로 거론되지만 아직은 때가 아니라고 여김. 그러나 대미 신형대국관계 수립을 요구
한국과 FTA비준. 일본은 포함하고 중국은 사실상 배제하는 TPP 추진	경제	아세안과 경제협력 강화. 한·중·일 FTA 및 RCEP 추진
남중국해 인접 호주 다윈에 미 해병대 주둔. 베트남·필리핀·인도네시아 등과 군사협력 강화	군사	자체개발 스텔스전투기 쟈-20(J-20)개발. 첫 항모 랴오닝(遼寧)호 실전배치 및 자체항모 개발 착수
동아시아정상회의(EAS) 등 아태지역 다자무대 적극참여. 대인도 협력강화 및 미얀마와 국교 수립 추진	외교	러시아와 유대강화 및 대 인도접근 강화. 상하이협력기구(SCO) 확대 추진. 적극적인 주변국외교 추진
아시아 회귀(Pivot to Asia) 및 재균형(Rebalancing)정책 추진	안보전략	접근거부/지역거부 (Anti-Access/Area-Denial) 전략을 통한 대미개입 대응



## 2. 중국이 그리는 동아시아질서의 내용과 전망

역사적 시각에서 볼 때, 세계강국의 부상은 먼저 그 나라가 위치하고 있는 지역에서 주도적 지위를 장악하는 것에서 시작되었다. 즉, 자국이 속한 역내에서 패권적 지위를 획득하고 영향력을 확대하는 것이 세계적 수준의 강국으로 발돋움하는 전제조건과도 같았던 것이다. 중국은 지리적으로 아시아의 중심에 위치하고 있으며 역사적으로도 오랫동안 아시아의 중심세력으로 작용해왔다. 중국은 육지로 아태지역의 14개 국가와 국경을 접하고 있으며<sup>13</sup> 한국, 일본, 필리핀, 브루나이,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등 6개국과는 서태평양에서 바다로 국경을 접하고 있다.

한편 동아시아지역은 중국의 국가안보이익이 가장 직접적으로 밀집되어 있는 지역이기도 하다. 중국이 강조하고 있는 이른바 ‘핵심이익(core interest)’의 대다수는 동아시아지역 내 중국의 주권, 영토, 국가통합, 지역안정 등과 관련된 것이다. 중국에게 있어 동아시아는 경제발전을 위해서도 매우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일례로 2012년 중국의 무역액 3조 8,700억 달러 가운데 동아시아국가들을 대상으로 한 무역액은 전체 무역액의 50퍼센트에 근접하고 있으며, 동아시아국가들의 대중국 투자액 비중은 50퍼센트를 넘고 있다. 또한 2025년 동아시아의 경제규모는 세계 경제의 40퍼센트를 점할 것으로 전망되기도 한다. 무엇보다 세계적 수준의 강대국을 향해 나아가는 중국에게 있어서 동아시아를 둘러싼 서태평양은 패권세력인 미국과 접점을 이루는 곳이다.

중국이 내부적으로 추구하는 동아시아전략의 목표는 “동아시아 역내에서 자신의 의지를 관철할 수 있는 지역강대국으로 입지를 다질 뿐 아니라 이를 바탕으로 세계강국으로 도약하기 위한 실질적 능력과 기반을 확보하는 것”으로 요약할 수 있다(박병광 2010, 49). 그러나 중국은 미국의 경우와 달리 아직까지 정부가 특정 지역에 관한 전략을 수립하여 대외적으로 공표한 사례가 없다. 다만 중국의 국책연구기관이나 전문가들은 동아시아 전략의 목표로서 중국이 지역패권을 향한 의지를 드러내기보다는 좀 더 현실적이고 주변국들이 수용할 수 있는 목표들을 강조한다. 즉, 동아시아 전략의 궁극적인 목표는 “선린우호와 공동발전의 기초 위에, 협력하고 함께 나아가는 새로운 아시아를 건설하며, 유관 각국의 공동노력을 통해, 중국현대화의 유리한 환경을 조성하고, 지역이익의 공진제도를 건설하며, 지역의 종합안보를 추동하고, 시대의 특징을 반영하는 공동가치관을 달성하며, 더욱 공정하고 합리적인 지역질서를 건립한다”는 것으로 정리된다(上海國際問題研究院 2008).

그러나 이러한 주장은 중국의 부상을 우려의 눈으로 바라보는 역내 국가들의 의구심을 완화시키려는 의도를 지니고 있으며, 실질적으로는 국력 신장에 발맞추어 자신의 영향력을 최대한 확대하려는 의지를 감추려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왜냐하면 중국은 미국과 공존함을 통해 일본을 비롯한 주변 국가들의 경제심을 낮추고 서구세계의 견제를 극복함으로써 역내 질서의 ‘공동 관리자’로 등장하는 것을 동아시아전략의 일차적 목표로 삼고 있다고 보여지기 때문이다. 그리고 그것은 중국이 현재의 국제정치·경제적 조건하에서 기존 국제질서에 도전하는 팽창정책을 모색할 경우 그 한계가 분명할 뿐 아니라 자국의 안보에도 치명적이라는 사실을 잘 알고 있기 때문이다.

중국은 적어도 2020년까지 동아시아에서 정치, 경제, 문화 등 다방면에서 힘과 영향력의 극대화를 통해 지역강국(regional power)의 입지를 구축한다는 전략목표를 설정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sup>14</sup> 이를 실현하기 위해 중국은 역내에서 정치, 경제, 군사적 영향력을 급속히 확대해 나가고 있다. 특히 경제적 측면에서 중국은 이제 ‘세계의 공장’이 아니라 ‘세계의 시장’으로 변모하고 있으며 역내 국가에 대한 시장제 공능력(market power)의 측면에서 주목할 만한 힘을 발휘하고 있다. 일례로 중국은 지난 2003년부터 미국을 제치고 한국의 최대 수출시장으로 부상하였으며 현재는 수출입을 합하여 최대의 무역대상국이 되



었다. 또한 일본에게 있어서도 중국은 양국 간의 정치적 긴장에도 불구하고 2007년부터 최대의 교역대상국이 되었다. 중국시장에 대한 역내 국가들의 점증하는 의존도는 결과적으로 경제 분야에서뿐만 아니라 대외관계 분야에서도 중국의 상대적 영향력을 키우는 중요한 요소가 되고 있다(Frost, Przystup and Saunders 2008, 1-8).

[표 3] 동아시아 각국의 대 중국 수출비중 (단위: 퍼센트)

	일본	한국	대만	아세안 6개국	인도
1986	4.7(4 위)	0	0	2.3(12 위)	0.74(28 위)
1996	5.3(5 위)	8.8(3 위)	0.54(23 위)	2.9(12 위)	1.8(14 위)
2006	14.3(2 위)	21.3(1 위)	22.7(1 위)	8.8(3 위)	6.6(3 위)
2010	18.1(1 위)	24.5(1 위)	23.4(1 위)	12.1(1 위)	6.3(3 위)

\*주: 아세안 6개국은 브루나이,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필리핀, 싱가포르, 태국 등

중국은 동아시아전략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일본과 협력외교를 추진하고 미국을 견제하되 대결을 회피한다는 입장을 견지해 왔다. 그러나 최근 들어서는 이른바 ‘핵심이익’을 강조하면서 이슈에 따라서는 훨씬 강경하고 공세적인 입장으로 선화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센카쿠(조어도)문제와 남중국해 문제를 둘러싸고 중국이 유관국가에 취하는 공세적 태도 그리고 방공식별구역(ADIZ) 선포과정에서 드러난 일방적 행태 등이 이를 입증한다고 하겠다. 이는 동아시아에서 먼저 주도적 위치를 구축해야 하지만 이미 미국이 구축해놓은 국제질서 속에서 독자적 공간을 확보해야 하는 중국의 입장에서는 어느 정도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고 할 것이다.

궁극적으로 동아시아지역은 중국의 영향력을 체현하는 지역적 토대가 될 것이며 동아시아에서 영향력을 확장하는 것이 중국의 국제지위를 강화하는 데 필수적 과정이 될 것이다(門洪華 2009, 55; 葉自成 2003, 307). 따라서 중국의 동아시아 전략은 앞으로 더욱 적극적이고 공세적으로 전개될 가능성이 높다. 그 결과 중국은 2020년경 동아시아에서 오늘날 미국이 누리고 있는 것과 같은 독점적 패권의 수준에 다다르는 어렵겠지만 적어도 미국과 힘의 균형을 이루면서 독자적 목소리를 낼 수 있는 ‘독립변수’의 지위에 도달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즉, 동아시아의 운명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역내질서의 새로운 ‘규칙제정자’(rule maker)로 등장할 것이며, 미국과 대등한 지위를 누리는 가운데 동아시아의 ‘공동 관리자’(joint dominator)로서 지역 강국의 반열에 오를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전망을 가능케 하는 근거로는 크게 세 가지를 들 수 있다. 첫째, 가장 중요한 근거는 중국의 경제력이 동아시아는 물론 세계무대에서 갈수록 핵심적 변수로 등장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적극적인 해석을 한다면 중국의 경제적 영향력과 파워는 실질적 수준에서 조만간 동아시아에서 미국과 대등하거나 미국을 넘어서는 수준에 도달할 것으로 예측해 볼 수 있다. 둘째, ‘미국의 쇠락’으로 대표되는 국제질서의 변화와 다극화 추세에 근거한다. 미국 국가정보위원회(National Intelligence Council: NIC)도 예측한 바와 같이 “2025년엔 국제체제가 세계화된 다극체제로 변화할 것이며, 동아시아에서 미국의 영향력은 크게 줄어들 수밖에 없을 것”(NIC 2008)이다. 셋째, 중국이 지닌 강한 강대국화 ‘의지’(will)에 기인한다. 중국은 스스로 동아시아의 주도국이 되기 위한 강력한 의지를 불태우고 있으며 이는 우리가 예상하는 것보다 훨씬 빨리 중국이 지역 강국의 위치에 다다를 수 있을 것이라는 전망을 가능케 한다.

물론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국이 2020년경에 이르러 동아시아에서 미국과 대등한 수준의 강국으로 부상하는 데에는 무시할 수 없는 도전요소들이 존재하는 것도 사실이다. 중국은 부패, 실업, 빈부격차, 민



족문제 등 다양하고 복잡한 정치사회적 문제들을 적절히 관리하지 못할 경우 언젠가 심각한 정치적 위기에 봉착할 수 있는 나라이다. 또한 중국이 동아시아의 진정한 리더가 되기 위해서는 역내 각국의 자발적인 지지와 수용을 이끌어내는 것이 필수적이다. 따라서 중국이 종합국력의 성장에 발맞추어 국내 정치사회적 문제들의 관리에 실패하거나 또는 국제적 가치규범의 창출과 수용을 조화롭게 이루어내지 못한다면 중국은 동아시아의 ‘미성숙한 강대국’(immature major power) 지위에 머물 수밖에 없을 것이다. 아울러 지역 강대국으로 확고한 파워를 보유한 미래의 중국이 하드 파워와 소프트 파워 부조화를 이루며 역내에서 자기의지를 배타적으로 투영하고자 시도한다면, 오히려 주변국들 사이에서 갈등과 마찰을 불러일으킬 수도 있다.

## V. 맺음말

21세기 국제질서의 핵심 축으로 작용할 미·중관계의 미래에 대해서는 다양한 전망과 시나리오들이 존재하지만 크게 두 가지로 나뉜다고 볼 수 있다. 하나는 중국의 부상과 미국의 갈등에 따른 충돌 불가피론을 주장하는 ‘비관론’이고, 다른 하나는 중국이 부상하면서 국제사회의 보편적 가치규범에 수렴되고 결국 현상유지세력(status quo power)으로 남을 것이라는 ‘낙관론’이 그것이다. 물론 여기에 한 가지 더하자면 키신저가 주장하는 바와 같이 두 나라는 어느 일방에 의해 지배를 받기에는 너무 크기 때문에 공진화(供進化)를 추구하면서 상호결박의 상황에서 타협과 협의에 의한 “제휴”(Consortium)의 길을 걸을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우리가 주목해야 하는 것은 미·중관계의 미래가 어떠한 식으로 결판이 나든 결국 가장 첨예한 긴장과 대립의 무대는 동아시아가 될 것이라는 사실이다. 미국과 중국은 동아시아에서 주도권을 놓치지 않기 위해서, 또는 새로이 장악하기 위해서 자국 중심의 아키텍처를 구축하고자 할 것이다. 이는 마치 1972년 미중 데탕트를 통해서 양국이 적(enemy)에서 경쟁자(adversary)로 옮겨갔듯이 오늘날의 전환적 상황은 양국에게 경쟁자에서 다시 적(enemy)의 상태로 이동할 것인지 아니면 동반자(partner)로 발전할 것인지 하는 갈림길에서 있는지도 모른다.

물론 양국은 표면적으로 상호 동반자관계(partnership)의 구축을 강조하고 있다. 미국은 중국에 대해서 결코 봉쇄(containment)의 의도가 없으며 중국의 발전과 국제무대에서 중국의 역할 확대를 환영한다고 선언한다. 중국이 주장하는 평화발전과 신형대국관계의 핵심에도 중국이 미국에 도전하거나 위협하지 않을 것이라는 메시지를 담고 있다. 그러나 양국이 주장하는 상대방에 대한 언술(rhetoric)의 내면에는 서로에게 양보할 수 없는 이른바 ‘핵심이익’과 자국 주도의 ‘아키텍처’를 건설하려는 전략적 의도가 담겨 있기도 하다. 결국 미·중 양국은 이익의 충돌과 합치 양 측면을 모두 가지고 있으며 이 가운데 현실적으로 합치의 부분을 강조하며 나아가고 있는 것이다.

오늘날 분명한 것은 동아시아에서 미국의 패권이 상대적으로 쇠퇴하고 그 공백을 중국이 빠른 속도로 메워가고 있다는 사실이다. 그리고 이는 미국과 중국을 제외한 나머지 국가들에게는 21세기 국제질서의 근본적인 변화 과정을 목도하게 만들고 있는 것이다. 그렇다면 이러한 대전환기에 한국은 과연 어떠한 전략적 선택과 대비를 추구해야 하는 것일까. 우리의 전략적 선택은 보다 냉정하고 균형적인 선택을 하는 가운데 가급적 독자적 운신의 폭을 확보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할 것이다. 그리고 이를 위해서는 아래와 같은 고려가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우선 한국으로서는 미국과 중국이 동아시아를 중심으로 벌이고 있는 경쟁과 협력의 판세 변화를 정확히 읽어야만 할 것이다. 미국과 중국은 이미 새로운 아키텍처를 건설하기 위해 자국 중심의 ‘포석’을 깔





기 시작했는데 한국을 포함한 주변국들은 아직도 이를 읽어내지 못하고 있다면 그 결과는 참담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강대국보다 먼저 질서의 변화를 파악하고 선제적으로 대응해야 하는 것은 독자적 세력권을 확보하지 못한 대부분 국가들의 불가피한 선택이라 할 수 있다. 그렇다면 한국은 한국 나름대로의 ‘독자적 생존전략’이 있어야 할 것이다. 앞으로 미·중관계가 공존과 동반자관계에 무게중심이 실리는 것이라면 우리는 미국과 중국 모두에게 ‘양방정책’(hedging)을 시도해야 할 것이다. 그러나 만일 핵심이익을 둘러싸고 양국이 대결과 국지분쟁까지도 불사하는 방향으로 나아간다면 결국 어느 일방을 선택해야만 하는 상황을 준비해야 할지도 모른다.

다음으로 미·중관계는 동아시아에서 대립과 충돌의 가능성도 있지만 상당기간은 이슈별로 협력과 갈등이 병존하는 모습으로 나타날 가능성이 더 높다고 할 것이다. 이는 경우에 따라서 미·중 양국이 상호간의 첨예한 갈등이슈를 놓고서 정당성 확보와 세(勢)불리기를 하는 과정에서 주변국에게 “어느 편이나”를 물으며 양자택일의 선택을 요구하는 사례도 증가할 수 있다는 점을 시사한다. 실제로 2011년 싱가포르에서 열린 상그릴라 대화 당시 중국은 한국 측에 남중국해 문제의 해법을 놓고 양자대화과 다자대화 가운데 어느 쪽을 지지하는지 기본 입장을 밝힐 것을 요구하였던 사례가 있다. 또한 이와 유사하게 중국의 방공식별구역 선포 직후 한국을 방문한 바이든(Joe Biden) 미 부통령은 “미국의 반대편에 베풀어주는 것은 좋지 않다”라는 발언을 함으로써 미중 사이에서 한국의 선택을 요구한 것으로 받아들여지기도 했다. 한국으로서는 어느 한 쪽에 일방적으로 다가가거나 편승하는 선부른 부화뇌동(附和雷同)을 경계해야 할 것이다.

끝으로 미국과 중국 사이에서 최대한 균형 잡힌 외교 전략을 추구하는 것과 별개로 한반도와 동아시아의 특정 외교·안보 현안에 관하여 ‘한국의 목소리’를 축적해 나가는 것이 필요하다. 국제무대에서 미국과 중국은 물론 주변국을 포함해 ‘관중’(觀衆)을 의식하는 일관성 있는 원칙의 외교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그래야만 향후 미·중 간에 갈등이 발생해도 ‘사안별 지지’(issue based support)를 추구할 수 있고, “한국의 정책은 원래 그랬다”며 강대국의 영향을 덜 받을 수 있는 공간을 확보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와 더불어 한국과 비슷한 국력 및 영향력을 보유한 나라들과 연대를 통한 ‘중견국연합’을 이룸으로써, 미·중 간 영향력 경쟁으로 인해 발생하는 소용돌이에서 제3의 목소리를 창출하려는 노력도 병행할 필요가 있다. ■



## 주(註)

- <sup>1</sup> 강대국의 부상에 대한 국제체제 및 기존 패권국의 대응방식에 대해서는 Schweller 1999, 7-17; 전재성 2008, 3-33 참조.
- <sup>2</sup> 중국은 세계의 강국이 되려면 먼저 동아시아의 강국이 되어야 한다는 입장을 지니고 있다. 반면 미국은 아시아로의 회귀정책에서 나타나듯이 동아시아를 중심으로 하는 아-태지역에서 중국의 패권세력화를 방지하고자 한다. 따라서 향후 지정학적(geopolitics) 측면에서 미국과 중국의 마찰 및 대립이 가장 첨예하게 나타나는 지역은 동아시아일 가능성이 높다. 이러한 시각에 대해서는 박병광 2010, 35-62; Friedberg 2011 참조.
- <sup>3</sup> 대표적인 사례로 1989 년 ‘천안문사건’ 이후 중국에 대한 금수조치, 1993 년 중국 상선 은하(銀河)호 수색사건, 1995 년 이등휘(李登輝) 前대만총통에 대한 비자발급과 對대만 대규모 첨단무기 판매, 1999 년 5 월 베오그라드(Belgrade) 중국대사관 폭격, 2001 년 4 월 미국정찰기와 중국전투기 충돌사건 등을 들 수 있겠다.
- <sup>4</sup> 사실 중국은 냉전시기 미중관계 정상화를 추진하던 시기부터 미국에 대해 대등한 관계설정을 요구해 왔다. 키신저에 따르면 1972 년 미중 정상회담에서 마오쩌둥(毛澤東)은 닉슨을 ‘접견’하는 형식을 빌리려는 데 애처로울 정도로 공을 들였다(헨리 키신저 2012, 313-314).
- <sup>5</sup> 1991 년 여름 덩샤오핑이 하달하여 중국외교정책의 기조로 삼게 한 “20 자 방침”은 “冷靜觀察, 穩住陣腳, 沈着應付, 韜光養晦, 有所作爲”이다(葉自成 2002, 62-66).
- <sup>6</sup> 중국지도부가 제시한 ‘화평굴기론’은 중국의 대만문제 처리 등 국제문제에 있어서 공세적 무력사용이미지 등이 논란이 되면서 중국위협론의 수위를 완화하는데 크게 성공하지 못했다. 이에 따라 ‘굴기’의 개념이 지닌 부정적 인식을 극복하고, 중국의 부상을 현대화 과정과 동일시하면서 부상의 목적·수단·결과가 모두 평화에 기반하고 있다는 점을 재확인시킬 목적으로 ‘화평발전론’으로 바꾸게 되었다.
- <sup>7</sup> 중국의 ‘핵심이익’에 관한 자세한 개념 규정은 중국정부가 펴낸 ‘화평발전백서’(中國國務院辦公室 2011)를 참조.
- <sup>8</sup> 시진핑 체제의 외교정책에 관한 인식 및 기조에 관해서는 외교담당 국무위원인 양제츠의 글(楊潔篪 2013)에 잘 나타나 있다.
- <sup>9</sup> 중국의 공세외교 행태와 영향에 관해서는 다음(김재철 2012, 29-59; Christenson 2011, 54-67; . Mearsheimer 2010, 381-396)을 참조.
- <sup>10</sup> 힐러리 클린턴 전 국무장관은 2010 년 7 월 베트남 하노이에서 열린 아세안지역안보포럼(ASEAN Regional Forum: ARF)에서 “미국은 남중국해에서의 항행자유에 국가적 이해가 직결되어 있다”면서 이 지역에 대한 항행자유와 해상통제권 불포기 의지를 표출한 바 있다(South China Morning Post July/25/2010).
- <sup>11</sup> 일각에서는 2008 년 글로벌 금융위기를 거치면서 중국의 대내외적 위상이 급속히 높아지게 되자 2009 년 12 월 코펜하겐 기후변화협약 국제회의 당시 원자바오(溫家寶) 총리가 오바마 대통령의 면담요청을 거절하면서 양국간 감정의 앙금으로 쌓였고, 2010 년 들어 미국이 중국에 대한 수모에 앙갚음을 시도하면서 미중관계가 갈등으로 치달았다고 보기도 한다.



- <sup>12</sup> 이 좌담회에서 시진핑은 이른바 ‘親誠·惠容’으로 대표되는 주변국외교에 관한 새로운 방침을 천명했는데, 그것은 “주변국과 더욱 가깝게 지내고(親), 성실과 성의를 다해 주변국을 대하며(誠), 중국의 발전과 함께 그 기회와 혜택을 나누고(惠), 주변국을 더욱 포용하며(容)” 나아간다는 것이다. 좌담회 관련 자세한 내용은 다음(<新華網> 2013/10/25)을 참조.
- <sup>13</sup> 현재 중국이 직접 국경선을 맞대고 있는 나라는 베트남, 라오스, 미얀마, 부탄, 네팔, 인도, 파키스탄, 아프가니스탄, 타지키스탄, 키르기스스탄, 카자흐스탄, 몽골, 러시아, 북한 등 14 개국이다.
- <sup>14</sup> 2020년의 시점이 중시되는 것은 중국지도부가 일찍이 2002년 16차 당 대회에서 개혁개방을 심화하여 2020년까지 ‘전면적 소강사회(全面小康社會)’를 건설한다는 목표를 제시한 바 있으며, 2020년까지를 중국이 굴기하여 강대국이 되는 ‘전략적 기회의 시기’로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鄭必堅 2013, 1-8).



## 참고문헌

---

- 김성걸. 2012. “중국의 반접근(A2), 지역거부(AD) 군사능력 평가,” <군사논단> 70.
- 김재철. 2012. “중국의 공세적 외교정책,” <한국과 국제정치> 28, 4.
- 박병광. 2010. “중국의 동아시아전략: 인식, 내용, 전망을 중심으로” <국가전략> 16, 2.
- 이동률. 2006. “중국 책임대국론의 외교전략적 함의,” <동아연구> 50.
- 한석희. 2004. “중국의 부상과 책임대국론,” <국제정치논총> 44, 1.
- 전재성. 2008. “강대국의 부상과 대응메카니즘: 이론적 분석과 유럽의 사례,” <국방연구> 51, 3.
- 헨리 키신저. 권기대 역. 2012. 《헨리 키신저의 중국이야기》. 서울: 민음사.
- Christenson, Thomas J. 2011. “The Advantages of an Assertive China: Responding to Beijing’s Abrasive Diplomacy.” *Foreign Affairs* 90, 2.
- Clinton, Hilary and Geithner Timothy. 2009. “A New Strategic and Economic Dialogue with China.” *Wall Street Journal*. July 27.
- \_\_\_\_\_. 2012. “Remarks at the U.S. Institute of Peace China Conference”. March 7.  
<http://www.state.gov/secretary/rm/2012/03/185402.htm> (검색일: 2012.3.15.)
- Cronin, Patrick. 2013. “The Path a New Type of Power Relations.” *PacNet* 80. November 7.  
[http://csis.org/files/publication/131108\\_Pac1380.pdf](http://csis.org/files/publication/131108_Pac1380.pdf) (검색일: 2013.11.10.)
- Friedberg, Aaron L. 2012. “The Next Phase of the ‘Contest for Supremacy’ in Asia.” *Asia Policy* 14. July.
- Friedberg, Aaron L. 2011. *A Contest for Supremacy: China, America, and the Struggle for Mastery in Asia*. New York: W.W. Norton & Company.
- Frost, Ellen L, Przystup, James J and Saunders, Philip C. 2008. “China’s Rising Influence in Asia.” *Strategic Forum*, 231. April.
- Harding, Harry. 1992. *A Fragile Relationship: The United States and China since 1972*. Washing, D.C: Brooking Institution Press.
- Ikenberry, John. 2008. “The Political Foundations of American Relations with Asia.” In John Ikenberry and Chung-in Moon (ed.), *The United States and Northeast Asia: Debates Issues, and New Order*. Lanham: Rowman & Littlefield Publishers, Inc.
- Kissinger, Henry. 2011. *On China*. New York: Penguin Press
- Lampton, David M. 2002. *Same Bed, Different Dreams: Managing U.S.-China Relations, 1989-2000*. Berkeley: University of California Press.
- Lawrence, Susan V. and MacDonald, David. 2012. “U.S-China Relations: Policy Issues.” *CRS Report for Congress*. August 2.
- Liberthal, Kenneth and Wang Jisi. 2012. *Addressing U.S-China Strategic Distrust*. Washington, D.C: Brookings Institution.
- Mearsheimer, John, J. 2010. “The Gathering Storm: China’s Challenge to US Power in Asia.” *Chinese Journal of International Politics* 3.
- NIC. 2008. *Global Trends 2025: A Transformed World*. Washington D.C: NIC, November.  
[http://www.dni.gov/nic/NIC\\_2025\\_project.html](http://www.dni.gov/nic/NIC_2025_project.html) (검색일: 2009.6.12.)



Schweller, Randall L. 1999. "Managing the Rise of Great Powers: History and Theory." In Alastair Ian Johnston and Robert S. Ross (eds.), *Engaging China: The Management of An Emerging Power*. New York: Routledge.

*South China Morning Post*. 2010. July 25.

Wang Yi. 2013. "Toward a New Model of Major-Country Relations Between China and The United States." Speech at the Brookings Institution. September 20.  
<http://www.brookings.edu/~media/events/2013/9/20%20us%20china%20foreign%20minister%20wang%20yi/wang%20yi%20english%20prepared%20remarks> (검색일: 2013. 10.15.)

陶堅, 1998. "構建中美關係的戰略經濟基礎." <世界知識> 4.

葉自成. 2002. "關於韜光養晦和有所作為: 再談中國的大國外交心態." <太平洋學報> 1.

葉自成. 2003. 《中國大戰略》. 北京: 中國社會科學出版社.

肖歡容. 2003. "中國的大國責任與地區主義戰略." <戰略研究> 1.

唐家璇. 2003. "中國跨世紀外交的光輝歷程," <http://www.fmprc.gov.cn/chn/36007.html> (검색일: 2013.9.20.)

中國人民共和國外交部. 2005. "胡錦濤, 在聯合國成立60周年首腦會議上的講話." 9月16日.  
[http://www.fmprc.gov.cn/mfa\\_chn/ziliao\\_611306/zyjh\\_611308/t212365.shtml](http://www.fmprc.gov.cn/mfa_chn/ziliao_611306/zyjh_611308/t212365.shtml) (검색일: 2013.9.17.)

\_\_\_\_\_. 2013. "楊潔篪談習近平主席與奧巴馬總統安納伯格莊園會晤成果." 6月9日.  
[http://www.fmprc.gov.cn/mfa\\_chn/zyxw\\_602251/t1048973.shtml](http://www.fmprc.gov.cn/mfa_chn/zyxw_602251/t1048973.shtml) (검색일: 2013.6.11.)

上海國際問題研究院. 2008. 《建設合作共進的新亞洲: 面向2020年的中國亞洲戰略》. 上海: 上海國際問題研究院.

門洪華. 2009. "中國東亞戰略的展開." <當代亞太> 1.

中華人民共和國國務院新聞辦公室. 2011. <中國的和平發展>. 北京: 中國國務院辦公室.  
<讀賣新聞>. 2012. 7月10日.

金燦榮·戴維來. 2012. "冷靜看待美國重返亞洲." <當代世界> 4.

王義危, 2012. "美國重返亞洲的理論基礎." <國際關係學院學報> 4.

中國國際廣播電台. 2012. "習近平要把中美關係塑造成21世紀新型大國關係." 2月16日.  
<http://gb.cri.cn/27824/2012/02/16/2225s3559315.htm> (검색일: 2012.2.17.)

胡錦濤. 2012. "堅定不移沿著中國特色社會主義道路前進為全面建成小康社會而奮鬥." 中國共產黨第十八次全國代表大會. 11月8日.  
[http://wenku.baidu.com/link?url=ULEW9d-AXd0WYO30rpYSlcd2PM0GIP-GI5cU\\_V6ap1p0LkB7EwgmwIGXPsiPuwOwLk8nW5Pax4t1X-nv4PYfjPbV8znBnJm7psS2Ovpgriy](http://wenku.baidu.com/link?url=ULEW9d-AXd0WYO30rpYSlcd2PM0GIP-GI5cU_V6ap1p0LkB7EwgmwIGXPsiPuwOwLk8nW5Pax4t1X-nv4PYfjPbV8znBnJm7psS2Ovpgriy) (검색일: 2012. 11.10.)

王毅, 2013. "探索中國特色大國外交之路." <國際問題研究> 4.

楊潔勉. 2013. "新型大國關係: 理論, 戰略和政策建構." <國際問題研究> 3.

鄭必堅, 2013. "21世紀第二個十年的中國和平發展之路." <國際問題研究> 3.

<新華網>. 2013. "習近平概括中美新型大國關係: 不沖突, 不對抗, 相互尊重, 合作共贏." 6月10日.  
[http://news.xinhuanet.com/world/2013-06/10/c\\_116107914.htm](http://news.xinhuanet.com/world/2013-06/10/c_116107914.htm) (검색일: 2013.6.11.)

\_\_\_\_\_. 2013. "習近平: 讓命運共同體意識在周邊國家落地生根". 10月25日.



[http://news.xinhuanet.com/2013-10/25/c\\_117878944.htm](http://news.xinhuanet.com/2013-10/25/c_117878944.htm) (검색일: 2013.10.27.)

楊潔篪. 2013. “新形勢下中國外交理論和實踐創新.” 〈求是〉 16.

[http://www.qstheory.cn/zxdk/2013/201316/201308/t20130813\\_259197.htm](http://www.qstheory.cn/zxdk/2013/201316/201308/t20130813_259197.htm) 검색일: 2013.8.17.



## 필자약력

국가안보전략연구소(INSS) 연구위원 겸 지역연구팀장. 상하이 푸단대학교(上海復旦大學)에서 중국 정치 전공으로 박사학위를 취득하였다. 도쿄대학(東京大學) 동양문화연구소 외국인연구원 및 서울대학교 국제문제연구소 객원연구원, 대만(臺灣)외교부 초청 타이완펠로우십 방문학자 등을 역임하였다. 주요 연구분야는 중국 대외관계 및 동아시아안보이며 한국국제정치학회 연구이사, 중국외교안보연구회 회장으로 활동하고 있다. 최근 논문으로는 "시진핑 지도부의 등장과 중국의 대외정책: '지속'과 '변화'의 측면을 중심으로," "South Korea-China Security Cooperation: Focusing on the North Korean Opening/Reform and Contingencies," "중국의 에너지안보정책과 중미관계 전망," 외 다수가 있다.



---

## 보다 나은 세상을 향한 지식 네트워크

---

- 동아시아연구원(EAI)은 미국 맥아더 재단(The John D. and Catherine T. MacArthur Foundation)으로부터 “동아시아 안보질서 변화와 한국외교”(East Asia’s Changing Regional Security Architecture and South Korea’s Foreign Policy) 연구의 재정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 본 자료집은 EAI의 연구 결과물로서 정책결정 및 학술연구, 각종 교육사업에 활용되기를 기대합니다. 본 자료집 내용의 일부 혹은 전부를 인용할 시에는 출처와 저자를 명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 보고서는 동아시아연구원 홈페이지 [EAI 출판]과 각 프로젝트 페이지에서 내려 받으실 수 있습니다.
- 보다 자세한 문의는 아래로 연락해 주십시오.  
김양규 외교안보연구팀 연구원 Tel. 02 2277 1683 (내선 108) [ygkim@eai.or.kr](mailto:ygkim@eai.or.kr)